

4월16일의악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악속국민연대(예금주)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
(문의 : 02-2285-0417 416network@gmail.com)

제 목 [성명] 해수부는 여당추천 위원 집단행동 사주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

날 짜 2015. 11. 19. (별첨 포함, 총 5쪽)

성 명

해수부는 여당추천 위원 집단행동 사주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

**내청와대 조사 막으려고 해수부 문건대로 기자회견 열었나?
특조위 독립성 침해하는 일부 특조위원들의 정략적 행동 강력히 규탄한다**

1. 오늘(11/19)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이 헌 부위원장,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 등 여당추천위원 5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가 외부세력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조사에 시간을 허비한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원 총사퇴’ 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바, 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조구난 활동 조사, 세월호 선체 조사 등은 특별법에 따른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영역으로서, 특조위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의 갑작스런 집단행동은 위원회의 성역없는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법에 보장된 위원회의 조사범위, 기간, 예산을 축소하려는 매우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처신이 아닐 수 없다.

2. 그런데 여당 추천 위원들의 갑작스런 집단행동은 언론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에서 해수부가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주문한 내용과 일치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서 해수부는 “BH조사 건 관련 적극 대응”을 요구하면서, 여당추천위원들이 조사의결과정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필요시 전원사퇴의사를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에서 진행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해수부 지시에 따라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면 여당 추천위원들의 기자회견 자체가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가로막기 위해 특조위의 활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4월16일의악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악속국민연대(예금주)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3. 여당 추천인사들의 기자회견은 특조위가 어제(11/18) 상임위원회에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신청사건을 오는 23일 특조위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이 헌 부위원장은 본인이 작성한 대국민호소문에서 “이번 대통령의 7시간에 관한 조사개시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특조위의 위법·불합리성 및 정치성 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정부의 대응의 적정성 대한 조사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성역일 수 없다. 또 세월호 선체 조사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이헌 부위원장은 “예산도 없고 세월호 인양에 지장이 있다”며 수중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일 뿐 아니라, 수중조사는 인양 후 선체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에 선체정밀조사를 위해 19억9천만 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4. 이 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나 선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세월호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특정 외부세력의 주문에 따른 것인 양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세월호 가족들의 조사신청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특조위에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고 이것이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이기도 한다. 한편, 정작 외부세력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은 조사대상인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로 나선 여당 추천 위원들이다. 심지어 이 헌 부위원장 등은 특조위 활동의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활동 기간과 예산의 정상화에 반대하여 활동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스스로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이 아니라 특조위 활동의 축소와 방해를 위해 활동해왔고, 활동할 것임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5.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추천위원들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여당 추천 위원들은 해수부와 청와대 등 조사대상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정략적 파당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협력하라. 무엇보다도 해수부 장관은 조사방해와 여당추천 의원들의 사보타주를 사주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그 문건 작성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끝.

■별첨 : 머니투데이 the300이 입수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4월16일의악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악속국민연대(예금주)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 ◇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중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
- ◇ 특조위의 ▲선체 조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활동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

1. 특조위의 BH 조사 건 관련 : 적극 대응

- (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

- 진상규명 소위(10.20)시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 중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위원장(권영빈, 야당 추천)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언한 바, 소위 의결시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참사 당시 VIP 행적)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여당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다수결)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

- 특별법 제6조제1항(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국회선출 10명(여당 5, 야당 5), 대법원장 지명 2명, 변협 지명 2명, 유가족 선출 3명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 특별법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 특조위 운영규칙 제14조 : 위원회 회의록은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회의록의 경우,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제출 여부 결정

2.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 조사 관련 :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협조

- (수중조사) 이미 특조위와 협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인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 (인양선체 조사) 인양 후 선내 정리 및 미수습자 수색시 특조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 특히, 미수습자 발견 가능성이 낮고, 진상규명과 연관성이 큰 구역(조타실 엔진룸 등)은 특조위 조사 인원·기간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안 검토
- ☞ 인양 추진과정 및 완료 후 특조위의 선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활동기간 연장기간의 최소화 도모
 - 특조위는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선체 인양완료('16.7) 전에 활동기간이 종료('16.6)된다는 점을 제시

3.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및 16년도 예산 증액 : 합리적 대안 제시

- (활동기간)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기산일인 “위원회 구성일”로 해석 가능한 ‘임명장 수여일(3.9)’을 고수
 - 6개월 연장 포함 활동기간은 '15.3.9일부터 '16.9.8일까지로 인양 선체가 '16.7월초에 육상 거치될 경우, 인양완료 후 약 2개월의 조사기간 보장 가능

< 임명장 수여일('15.3.9)의 근거 >

- 특조위 제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특조위 활동이 실질적으로 개시
- 위원장·부위원장이 선출되어 위원회 운영체계 완비
 - 특별법 제6조제3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는 임명장 수여일을 활동기산일로 함

- ('16년도 예산) 상임위 예산소위 결과를 존중하여 ▲사업비 등은 소위 결과(약 61억원 증액)를 준용하되, ▲인건비·기관운영비의 경우에는 활동기산일인 '15.3.9일을 고려, '약 2개월'에 대한 예산(약 13.5억원)*을 증액
 - 총 13억 4450만원 : 인건비 6억 900만원(月 3억 450만원), 기관운영비 7억 3550만원(月 3억 6,775만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 ☞ 활동기산일 관련 우리부 입장(임명장 수여일, 3.9) 관철시, 증액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우리부의 의견을 전달

< 참고 : 상임위 소위 특조위 '16년도 예산 심의 결과 >

특조위 요구액	정부안(A)	증액(B)	감액(C)	심의결과 (A+B-C)
198.8	61.7	61.2	0.5	122.4

- (부대의견) 활동기간 6개월 연장시, 인건비 18억 2,700만원(月 3억 450만원)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22억 650만원(月 3억 6,775만원) 등 총 40억 3,350만원 추가 증액

4.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

- (특조위-정부간) 해수부-특조위 여당추천위원간 협조·소통채널 강화

- BH 조사건 관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 해양정책실장-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 면담(2차례)시 既 협조요청
- 해수부 차관-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간 추가 면담을 통해 동 조사건 관련 제차 협조요청 예정

- 부위원장이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매주 월, 수 : 11.9, 11.11)시 동 건이 11.16일 특조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

- (특조위 내) '부위원장(사무처장)-여당추천위원 및 파견공무원'간 소통 강화

- (여당추천위원) 정례 미팅을 통해 주요 안건 및 의사결정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 (파견공무원) 사무처장으로서, 주요 파견 간부(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과장 : 11월중 파견 예정)와의 소통 강화